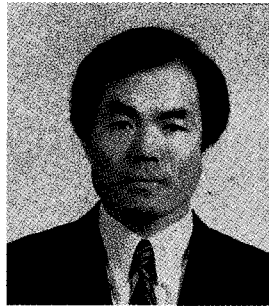


'96년도 낙농육우산업 결산



김인식
본회 조직지도부 부장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올해 만큼이나 어려움을 크게 겪는 해는 일찌기 없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분유체화 문제에도 소값 폭락이 겹쳤고, 절박도축우 보도파문에 따른 도축부조리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는가 하면 0-157 사건의 여파, 광우병 우려에다 발암물질 사건까지 겹쳐 업친데 덮친 격이 되었다.

병자년 한해는 소 사육농가에게 불운을 선사한 채 저물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위기적 상황으로 결과가 드러날 것이 분명하고, 새로운 해법의 대응 없이는 낙농육우 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올해에 있었던 주요 내용을 다시한번 짚어 보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꾀직한 사안들에 대해 언급코자 한다.

분유체화의 심각성

지난해 말부터 누증되어온 분유재고는 계속적인 체화상태로 한해를 넘기고 있다. 성수기에도 1만톤 이상의 재고 적체기록을 보였고 연중내내 이 문제로 유

업체의 경영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낙농조합의 경우 계속되는 적자 경영으로 조합 운영자체의 어려움이 생겨나는가 하면, 더 이상 가증될 경우 파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듯 분유재고가 쌓이는 추세는 아예 장기화되고 예년처럼 적절한 시기에 해소되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장기적인 낙농전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실상을 호소하면서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모조분유 수입을 억제해야 된다고 강조해도 식품업체들이 값싼 모조분유 사용에 치중하는 한 별반 효과는 없다.

모조분유 수입증가에 따라 국산분유 유통가격은 아예 정상적인 판매가를 상실하고 말았다. 제조 원가가 6천원대인 국산분유 가격이 수입 모조분유 범람으로 3천원대에 판매되고 있음이 그 예이다. 따라서 분유 생산분 만큼 손해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한 영세 유업체, 특히 조합의 경우 경영압박을 해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유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유업계의 큰 어려움이다. 계절적인 소비편중 현상도 그러하지만, 주말의 우유소비 둔화는 결국 분유로 만들어 저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유를 만들면 사갈 수 있는 소비처가 없고보면,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분유는 생산해야 하고, 생산된 분유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면 구조적으로 유가공업의 경영안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유는 보관용으로 보존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아무리 값싸게 해서라도 팔아넘겨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유업계의 사정은 심상치 않다. 특히 영세조합의 경우 시유에 국한되어 생산하기 때문에 쌓인 재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이 있을 수 없다. 실제로 국내 유업체들이 분유 생산자이자 소비자 이므로 생산된 분유를 원료로하여 가공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국산보다 값싼 모조분유 수입에 치중함으로써 심각성을 더하게 하고 있다. 값싼 모조분유를 사용한 유업체와 비싼 국산분유를 원료로 쓰는 낙농조합과의 경쟁에 있어 협동조합은 버틸수 없음을 물론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재고분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재고분유 소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면서, 협회에서는 계속적 인건의 활동을 해왔다.

농림부의 입장이 유업체등 식품업체들이 값싼 모조분유 수입이 자체되어야 우유수급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수입 억제를 요구한다면,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값싼 모조분유 수입에 치중하여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국내 낙농가 보호차원에서 비싸지만 국산분유 사용에 적극적인 업체와의 대우가 동등해서는 제도적으로 수입을 차단할 수 없다. 국산 분유만을 사용하는 유업체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분유 생산가격 지원이나 판매가격 보전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입을 억제할 수 있고, 국산 분유 사용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중 내내 정부에 건의하였지만,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

분유체화의 어려움이 비단 유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유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결국 낙농가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66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올해 만큼이나 어려움을 크게 겪는 해는 일찍이 없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분유체화 문제이다 소값 폭락이 겹쳤고, 절박도축우 보도파문에 따른 도축부조리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는가 하면 O-157 사건의 여파, 광우병 우려에다 발암물질 사건까지 겹쳐 업진데 뎃진 격이 되었다.

이대로 가면 위기적 상황으로 결과가 드러날 것이 분명하고, 새로운 해법의 대응 없이는 낙농육우산업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임은 틀림없다.

77

재고가 쌓이고 경영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는 원유 검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기화되면 될수록 낙농가의 피해가 클수 밖에 없고, 그만큼 낙농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협회에서는 체화분유 해소 대책을 여러 각도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입장에서 수입자제 요청에 선뜻 응할리 없음을 이해하지만 낙농가와 유업체가 공존해야 살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익이 국내 낙농업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제기하여 수입 억제를 간곡히 요청해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지않은 유업체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오고 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유업체가 값싼 외국산 모조분유 수입에 치중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산업피해구제신청 절차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하여 간곡히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왔다.

모조분유가 관세 8%내지 40%로 값싸게 수입되어 국내 낙농업을 어렵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유]로 분류되어 적정 관세율로 인상되도록 하는 것만이 방안이 아닐수 없다. 무역위원회의 판정 결과 수입에 의한 국내 낙농업의 피해가 있음이 드러났고, 후속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당초 UR협상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

96년 한해를 낙농 최악의 해로 표현하는 낙농계들이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례없던 악재들이 터져 나왔고, 그것도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분유에서의 발암물질 보도 때문이다. DOP, BOP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 운운하는 터에 낙농은 일순간 혼란스러웠고, 국민 모두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

이 사실이다. 수입 개방을 정부가 결정하여 유업체로 하여금 눈독을 들이게 하였고, 그 결과 분유체화의 심각성이 논의되고 있다면 근원적인 조치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관세 인상의 조치가 마련 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유 소비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만이 국내 낙농업의 활성화 방안이 아닐수 없다. 이에 협회에서는 우유소비 캠페인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전국에 정부의 홍보대책 강화를 건의하여 왔다. 물론 유업체의 적극적인 공동 홍보등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여 온것은 말할 것도 없다.

소값의 폭락과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발족

소값이 수년간 안정세를 유지하다. 4월부터 폭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줄곧 소값 안정에 영향을 받은 농가들의 사육열기가 냉각되었고 소값 하락에 따른 우려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500kg 한우 황소를 기준으로 330만원대의 소값이 250만원대로 하락하자 소사육 농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소값하락의 원인은 단순하지는 않다고 본다.

광우병 파문이 3월하순에 일자 쇠고기 소비가 급격히 둔화되는 결과를 보여, 4월 기준으로 국산 쇠고기는 전년동기대비 약4% 감소하였고, 수입 쇠고기는 약 5%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 4월 총선이후에도 경기불황으로 계속 소비 감소추세로 나타났고, 선

거철의 소값 상승 기대심리가 무너지자 시장 출하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그 한 원인이라고 본다. 뿐만아니라 배합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로인한 시장 방매현상 역시 소값 하락의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가의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지난해부터 무려 네차례의 인상이 있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두 자리수 이상의 인상에 이어 올해 역시 두차례 인상이 있었고, 인상을을 합하면 뽕게는 40%에 육박하는 가격인상으로 소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더하여 쇠고기 수입량은 쿼터를 초과하여 수입되어 지난해 쿼터 12만 3천에다 2만 3천톤이 증가된 14만 6천톤의 물량이 수입되었다. 올해 쿼터 14만7천톤 중에서 1~5월까지 8만9천톤이 수입되어 쿼터의 60%가 이미 들어왔고, 정부의 무제한 방출 정책이 소값 하락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소값이 높아 낮추어야 한다는 홍보가 계속되었고, 2000년도의 한우 가격지표는 500kg 황소 기준으로 200만원이라는 점이 부각된것은 현실 소 값과 너무도 큰 거리를 느끼게 하였으나, 소값 하락이 그러한 지표 가격과의 무관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한우의 다두사육을 장려하였고, 장기 비육을 권장 해온만큼 소값 하락은 다두사육 장기 비육의 농가에서 피해가 큰 결과를 가져왔고, 농가의 불멘소리도 높았다.

소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수매정책을 실시 하였고, 250만원대 선에서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 수입육 방출을 축소하여 국산 쇠고기의 소비를 최대한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소값을 그 런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한우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한우 농가로 하여금 많은 자극을 가져다 주었다. 소값만을 기대하면서 사육하던 종전의 개념으로는 한우의 안정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고, 한우의 고 급육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양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우 직판점으로 소비자에게 잘키운 한우고기 맛을 선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값 하락이 종전의 소파동과 같지는 않다하더라도 농가에서 한우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논의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우 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학자와 행정담당자, 한우농가대표, 단체대표등 한우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원제로 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올해 들어 두차례의 토론회를 가졌다.

8월의 1차 모임에서는 절박도축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토론회를 갖고,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여 절박도축의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추진하였다.

11월의 2차 모임에서는 도체 등급제 실시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물론 정부의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참석자의 토론을 실시한다. 3차 모임은 2월중에 개최하되 소값 전망을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은 연장되고 냉장육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의 국내 한우 가능성이 지금처럼 막연한 상태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면 스스로의 자구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경쟁력제고를 위해 한우 산업 전반의 문제점 부각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가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협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9.23 낙농인대회 개최

96년 한해를 낙농 최악의 해로 표현하는 낙농가들이 많다.그것은 지금까지 전례없던 악재들이 터져 나

왔고, 그것도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 또 다시 재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그 만큼 낙농에 대해서는 감시자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식품으로서의 위상이 높게 자리하였다는 반증일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분유에서의 발암물질 보도 파문이다. DOP, BOP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은 운하는 터에 낙농은 일순간 혼란스러웠고, 국민 모두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인 우유에 국민의 최대 공포심이 유발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었느냐에 의문을 던져주기 시작하였다.

사건의 근원은 영국에서 부터 비롯된다. 영국은 올해 내내 광우병 사건이다. 식중독이다 하여 세계의 소사육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불안케하는 진원지가 되었었다. 올해 6월 영국에서 유아용 분유에서 프탈레이트(phthalate) 검출사건이 보도되었으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된바 있다. 혹시 우리 우유에서는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는 수입 및 국산분유에 대해 실험 분석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의 중간 결과가 서울방송(SBS) 모기자에게 넘겨져 특종기사인양 보도되면서 일제히 언론의 화살 공세가 집중되었다. 9월 13일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국산분유에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톱기사가 보도되면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게 되었고, 과연 우유는 안전한 식품인가에 대해 의

“

낙농제도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언급하기 싫은 분야가 있다면 낙진법 개정문제일 것이다. 낙농가간에 찬반 양론에 머물러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개정에는 반대하는 일부 낙농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낙진법의 개정 없이 낙농문제의 제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수 없다.

”

문을 갖게 되었다.

탄저병사건 파문에 이은 우유의 항생·항균제 검출 보도파문, 영국 광우병 파문, 0-157보도 파문 등으로 소사육 농가를 불안속에 몰았다가 급기야 발암물질 보도에까지 왔으니 끝까지 온 셈이다.

협회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장을 만나 직접적인 해명과 설명을 요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안전본부측에서는 시중 언론의 오보를 성토했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전혀 인체에 무해함을 국민에게 알려줬다는 약속만 반복하였다. 국내에 수입 모조분유의 본격적인 상륙을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사건은 국산보다 수입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수입을 부추기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혹에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강구할 정부기관에서는 연속적인 소 관련사건을 터뜨려 공포로 몰아 놓고 결국에 가서는 호기부지하는 결론으로 무해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렸다. 참아도 더는 못참겠다는 낙농가의 분노가 전국에서 울려 퍼졌고, 급기야는 9월 23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 낙농인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8년 1월 8일 쇠고기 수입재개 저지를 위한 낙농육우인대회에 이은 정부청사앞에서의 두번째 대회가 열리기에 이른다.

분노한 낙농기들의 함성이 청사에 집중되었고, 낙농을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한다면 정부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만약 불필요한 산업이라면 하루 빨리 포기하도록 선언해달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대회에서는 대표단이 구성되어 농림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하여 낙농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어냈다. 재고분유 수매 실시, 낙농기자재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마련, 우유 홍보활동 추진, 발암물질 사건 관련자 전원의 파면 등 중징계 조치,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낙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실시등의 요구사항을 양부처에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이날 대회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요구사항중 발암물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체 직원의 구속과 함께 사건관련 기자와의 법정 시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명의의 우유 홍보광고가 일간지에 실렸으나 장관의 공개사과는 없었다. 재고분유 수매는 무역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낙농기자재의 일괄 구매공급을 제시하였고, 우유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선에서의 답변이 현재 어느 정도 실행 수준인지를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낙농제도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언급하기 싫은 분야가 있다면 낙진법 개정문제일 것이다. 낙농가간에 찬반 양론에 머물러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개정에는 반대하는 일부 낙농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낙진법개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묵은 논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협회와 낙농가간에 갈등을 빚을 우려가 다분하여 차라리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낙진법의 개정 없이 낙농문제의 제도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수 없다.

14대 국회에서 수년간 논쟁되었고, 정부와 당이 당정합의까지 하고서도 여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과 때문에 15대 국회에 다시 연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4대 국회에서 무위로 끝나자 농림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 낙농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60명 가까운 낙농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낙농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논쟁과 토의 끝에 나온 결론은 낙농진흥법 개정골자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골자로 하여 낙진법개정안은 요약되어지게 되었다. 농림부는 낙진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도, 이에 찬반양론이 다시 제기되었다. 반대하는 충남 집유조합장의 신문광고가 나오는가 하면 대다수 찬성을 주장하는 측의 소리 또한 거세게 일게 되었다. 결국 농림부는 국회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개정을 기대해온 대다수 낙농가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다.

결국 낙농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낙농가 주도로 국회의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국회에 상정되었다. 분유가 남아 해결방안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지우게 되는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모순을 낙농가간에 반복해야 되는지에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공업무등 농림부에서 주어져 있고 낙농문제의 해결과제는 산적해있는 마당에 과연 이대로만 지켜보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85명 서명 날인한 국회의원 입장에서 낙농가간에 찬반양론의 소리에 한심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에서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기대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낙농육우산업 대변활동

갈수록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낙농육우산업 분야 역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대응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론 조성 과 정치적 분위기 유도, 장관감담회 개최, 청와대 농림수석과의 간담회 개최, 3당 총재 및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주요사안에 대응해 왔다. 아울러 연속적인 배합사료가인상에 다소나마 부담 감소를 위해

“

유가공업무등 농림부에서 직접 정책으로 연결되는 업무가 관장되도록 하여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추진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축산물 가공업무 및 위생업무가 농림부로 환원되어야 함을 거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도록 유도해 냈다. 조속히 논의과정을 거쳐 농림부로 환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협회는 계획하고 있다.

”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적극추진하였고, 그 결과 신한국당에서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였으나 결국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1월 1일부터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축산단체들이 감사문을 광고까지 게재하는 해프닝을 두고 볼 때 농가에서 농민의 힘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해가 되었다.

유가공업무등 농림부에서 직접 정책으로 연결되는 업무가 관장되도록 하여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추진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축산물 가공업무 및 위생업무가 농림부로 환원되어야 함을 거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도록 유도해 냈다. 연속적인 유유사건 쇠고기 사건이 터지자 본회의를 미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속히 논의과정을 거쳐 농림부로 환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협회는 계획하고 있다. 축산업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축산문제의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발전대책협의회>를 우리 협회에서 존치시키고 있다. 20개 축산단체와 10개 축산관련 학회를 모두 망라한 촉발위에는 오봉국교수가 회장을 맡고 김남용회장이 부회장직을 맡아 사무를 우리 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축산 개별단체의 미약성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촉발위가 발족된것 역시 단합의 상징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